

# 과거사 극복을 위한 독일도서관의 도서반환 활동에 관한 연구

- 유대인 장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Restitution Activities of Germany's Libraries to Overcome the Past: Jewish Book Collection

노문자(Moon-Ja Ro)\*

### < 목 차 >

I. 서론	IV. 과거사 극복을 위한 독일도서관의 활동 : 약탈도서 출처 조사
II. 나치시대의 도서관	1. 워싱턴 선언
1. 나치시대 도서관장서의 이데올로기화	2. 공동선언문과 가이드북
2. 나치시대 도서관 장서관리	3. 하노버총구서
3. 나치시대 도서관 사서	4. 테레지엔선언
4. 나치시대 조직적인 장서 약탈	5. 카이로국제회의
III.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협약과 독일도서관 환경	6. 도서관의 약탈도서를 찾아내기 위한 지침서
1.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협약	7. 약탈문화재중앙관리본부(KK)
2. 전쟁 후 독일도서관 상황	V. 오늘날 약탈도서 반환에 관한 독일사서들의 인식
3. 독일 통일 전까지 약탈도서 반환을 위한 환경	VI. 결론 및 우리나라 도서 환수를 위한 제언

### 초 록

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주도로 독일이 점령한 국가에서 약탈한 도서를 상당 부분 반환하였다. 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약탈한 도서의 반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1989년 동독의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나치 희생 유대인들의 보상 청구운동이 미국과 유럽에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나치 시대에 약탈당했던 유대인의 재산 반환 문제가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된 것과 맞물려 있다. 독일 도서관은 전쟁이 끝난 60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1933년과 1945년 사이에 입수한 약탈도서를 자신들의 도서관으로 소장하고 있다. 1998년 홀로코스트-시대의 자산에 대한 워싱턴 회의를 시작으로 독일도서관에서도 그들이 소장하고 있던 유대인 약탈도서를 찾아내어 반환해야한다는 흐름에 동조하게 되었다. 도서반환을 위해서는 먼저 약탈도서의 출처를 알아내야 한다. 독일 도서관들은 약탈도서 출처조사를 실행한 실용적인 지침서 발표, 찾아낸 약탈도서를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탈도서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몇몇 도서관들은 약탈도서를 반환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 숫자는 미미하다.

키워드: 나치시대 도서관, 도서반환, 유대인 약탈도서 출처, Lost Art Database, 약탈문화재중앙관리본부

### ABSTRACT

Germany has started restitution process for most of collections from its occupied countries after World War II which was strongly led by the United Nations. However, this process did not include many of the plundered Jewish collections. In 1989, restitution for the Jewish's properties confiscated by the Nazis became important international issue with success i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 in the U.S and Europe countries after German unification. German libraries has still possessed collections sequestered by the Nazis from 1933 to 1945. With Washington conference on holocaust-era assets in 1998, libraries began to sympathize with restoration of their Jewish confiscated collections. In present, by identifying the provenance of those collections at primary level, German librarians focus on various restitution activities for those collections in order to introspect and overcome their past. Specifically, the libraries publish the practical guidebook of studies on the provenance identification and open the database for the pillaged collections to the public. Few libraries start to restore the collections, but the numbers of the restituted collections are still insignificant.

Keywords: Libraries of Nazi era, Book Restitution, Provenance of Jewish Book, Lost Art Database, Coordination Center for Pillaged Books

\* 숭의여자대학 문헌정보과 부교수(lomj@sewc.ac.kr)

• 접수일: 2010년 5월 21일 • 최종심사일: 2010년 5월 29일 • 최종심사일: 2010년 6월 25일

## I. 서론

오늘날 국가 간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대부분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에서 탈취된 문화재가 대상이 된다. 국제적으로 과거 제국주의 시대나 식민통치하에서 저질러진 문화재 약탈을 다루는 국제법은 아직까지는 제정되지 않았다. 전시 약탈을 금하는 국제 관습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관습법에 따라 약탈된 문화재를 환수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문화재 반환을 위한 노력은 국제회의나 협약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독일에서의 약탈도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대 워싱턴에서 나치 희생 유대인들의 보상 청구 운동이 성공을 거두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독일 도서관들은 나치 시대에 독일이 점령한 국가의 도서관장서와 유대인의 문화재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입수하였다. 전쟁 후에는 전쟁의 피해로 도서관 재건에 몰두하느라 약탈도서에 관한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고 변론했고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1933년과 1945년 사이에 입수되었던 많은 양의 약탈 도서가 독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도서관들이 그들의 과거, 즉 나치 시대 만행의 잔재인 약탈도서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동시에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재 반환에 관한 선언문과 촉구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이들 선언문과 촉구서가 실제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독일 도서관들이 약탈도서의 출처를 밝혀내고 반환하는 작업 등을 명시한 실용 지침서와 가이드북, 문화재 반환을 위해 설립된 약탈문화재중앙관리본부(Koordinierungsstelle fuer Kulturverlust : KK), 약탈 도서를 찾고자 하는 기관과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나 개인 등의 정보광장인 Lost Art Database, 현재 독일 도서관들의 약탈도서 반환에 관한 인식 등이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 교섭을 계기로 하여, 약탈 문화재의 반환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약탈 문화재 환수 운동에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의 문화재 환수 운동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카이로 국제 문화재 환수 회의에 참여하여 더욱더 이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도서관들의 약탈도서 반환을 위한 활동들은 우리의 해외문화재 환수에 참고가 될 수 있다.

## II. 나치시대의 도서관

### 1. 나치시대 도서관장서의 이데올로기화

독일은 나치시대에 점령한 국가를 문화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도서관장서의 몰수와 정화작업을

매우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독일 사서들은 독일인들이 사용하기 위해 보호해야 할 자료목록인 화이트리스트와 독일화 과정에서 파괴되어야 할 자료목록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나치 정부는 유럽의 사고방식을 독일식으로 바꾸고, 점령한 국가의 전통과 문화적으로 타협되지 않은 세력과 싸움에 독일 교육기관들과 학자들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나치당은 이러한 작업을 위해 책과 도서관의 통제가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1)</sup>

나치정권은 독일의 출판 산업을 통제하면서 사서들과 책 도매상들을 재교육시켰다. 그들의 이념에 위배되는 자료들은 도서관에서 폐기되었다. 독일에서 지식을 다루는 모든 기관들은 나치의 비전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출판하게 하였다. 나치정권은 도서관 장서를 정화하고 출판을 통제하여 그들이 의도하는 건전한 자료를 더 많이 읽도록 권장하였다.

도서관장서의 나치화는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1930년 후반에 설립된 공공도서관은 과학부, 교육부, 대중계몽부의 통제를 받았다. 체제 순응적이지 않은 자료는 거의 나치 자료로 대체되었다. 특히 뮌헨(Muechen)의 공공도서관들은 국가사회주의의 문화적인 의지를 위협하게 만드는 책을 처분하는데 순응한 대표적인 예였다. 반면 대학도서관의 장서는 공공도서관의 조치보다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 자료의 선정에 있어서 민족사회주의 사상의 출판물은 당연히 선호되었다. 그러나 학술도서관에서는 나치정당의 이념에 위배되는 출판물도 힘든 토론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사실상 구입은 가능했다. 이렇게 어렵게 입수된 장서는 다른 도서들과 분리되어 특별 목록에 정리하여 서고에서도 별도로 비밀스럽게 관리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이용은 정치적 신념을 전제로 특별한 요청이 있을 시에만 가능했다.<sup>2)</sup>

나치 정부의 도서관 정책에 사서들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했던 것은 아니다. 예나(Jena)대학도서관은 그들 장서의 30% 이상이 나치이념에 위배된 도서로 폐기처분되어야 할 형편에 처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서들은 장서의 내용점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할레(Halle) 대학도서관과 볼펜뷰텔(Wolfenbuettel) 도서관은 유대인 문학작품의 폐기를 피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장서로 분류하거나 위장하기도 했다.<sup>3)</sup>

2차 세계대전 때 도서관은 행정면에서 교육학문성 관할 하에 있었으나 당시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라이프치히의 독일도서관은 예외로 나치당의 선전부에 속해있었다. 나치당 선전부장이었던 괴벨스(Goebels)는 나치 이념에 위배되는 출판물의 수집과 이러한 자료를 국가서지에 수록하는 데는 개입하지 않았으나 1936년부터 국가서지의 기술은 별도로 관리했다.<sup>4)</sup>

1) Eric Carlton, *War and ideology*(Savage, Maryland : Barnes & Noble Books, 1990), p.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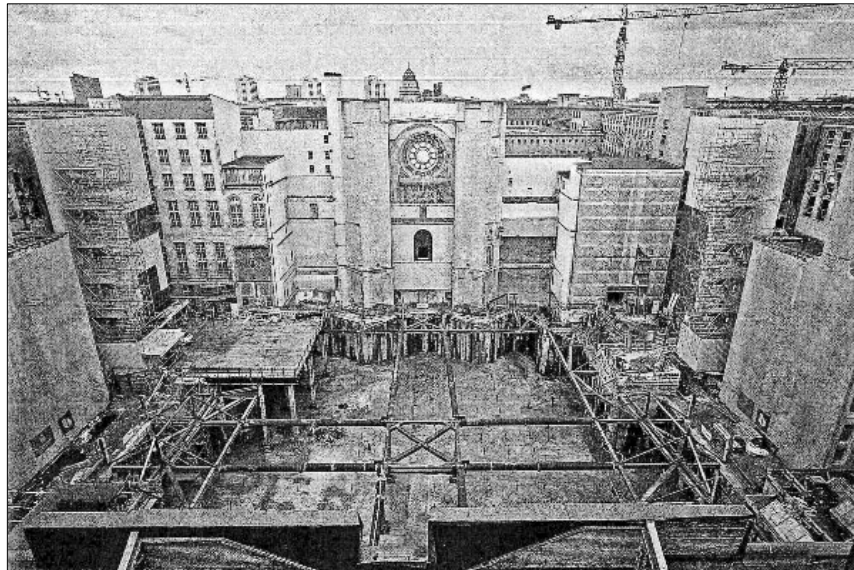
2) Ch. Quasten, "Bibliotheken waehrend des Nationalsozialismus," *Zeitschrift fuer Bibliothekswesen und Bibliographie*, 38, H.2(1989), p.165.

3) *Ibid.*, p.166.

4) *Ibid.*, p.169.

## 2. 나치시대 도서관 장서관리

전쟁을 전후로 독일도서관들은 그들의 장서 보존과 안전을 위한 대처 방안은 도서관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2차 대전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1935년 함머(Hammer)<sup>5)</sup>는 최신 공중 폭격기를 이용한 전쟁에서는 그 어느 전쟁에서보다도 도서관의 피해가 막중하다고 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특히 낙후된 도서관 건물에 대한 안전보수사항 이외에도 도서관 목록과 장서의 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보안방법을 촉구했지만<sup>6)</sup> 이러한 호소는 전쟁 발발 때까지 큰 반향을 얻지 못했다. 1942년에서야 나치정부는 모든 문화재의 안전을 위해서 문화재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했다. 1942년 교육부는 도서관의 공중폭격에 대한 지침서를 발표하였으나<sup>7)</sup> 이 때는 이미 몇몇 도서관들은, 예를 들어 <그림 1>에서처럼 베를린국가도서관은 폭탄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sup>8)9)</sup>



<그림 1> 베를린국가도서관 일반 열람실

- 
- 5) F. Hammer, "Luftschutz in Bibliotheken," *Zeitschrift fuer Bibliothekswesen(ZfBB)*, 52, H.6(1965), p.476.  
6) F. Dressler, "Bomben auf die Bayerische Staatsbibliothek," *Bibliotheksforum Bayern*, 21(1993), p.247.  
7) H. Hauke, "So ueberstanden die Handschriften den Zweiten Weltkrieg," *Bibliotheksforum Bayern*, 22(1994), p.59.  
8) H. List und D. Luelfing, "Staatsbibliothek zu Berlin \_ Vorbeugender Katastrophenschutz im Rahmen der Generalisierung des Hauses unter den Linden und des Neubaus des Lesesaales," *ZfBB*, 56, H.3-4(2009), p.183.  
9) 노문자, "도서관환에 관한 연구 - 독일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2002. 6), p.23.

수많은 도서관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들 장서의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했다. 바이에른국가도서관은 1940년에 이미 귀중도서, 手書, Inkunabel과 고가의 도서를 철제나 강판 금고에 보관하였다. 그 이외의 장서는 도서관 건물의 지하실에 옮겨졌으나, 이 장소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자 다른 지역의 수도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장서를 이동시키는 문제는 전쟁으로 인한 인력과 수송 수단의 부족으로 매우 어려웠다.

베를린국가도서관은 1941년에 장서의 안전보관 장치 작업에 착수하였다. 장서의 이동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제일 먼저 고서인 手書와 희귀본, 그 후에는 중요 장서, 서고의 장서, 각 부서의 참고도서 순으로 이동되었다. 이 장서들은 상대적으로 폭격의 위험이 적은 농장, 교회, 수녀원, 성, 광산에 보관됐다. 장서는 처음에는 상자 단위로 포장하여 리스트가 작성되고 난 후 옮겨졌지만 나중에는 포장 할 상자조차도 부족하여 리스트 작성도 하지 못한 채로 기차 칸에 배의 짐짝처럼 옮겨졌다.<sup>10)</sup> 이 도서관에서는 폭격으로 인해 장서가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거나 완전히 소실될 것을 염려하여 귀중본에 한해서는 복사본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획안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당시 재정 상황의 악화로 실현되지 못했다.

베를린국가도서관의 장서들은 29곳의 창고에 분산되어 보관되었다. 이 중 12개는 독동지역, 11개는 폴란드지역, 5개는 서독지역, 나머지 1개는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의 창고였다. 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들도 1942년에는 공식적인 장서 이전 지침서가 발표되면서 그들의 장서를 광산이나 그 외의 안전지대로 옮겼다. 이 와중에도 몇몇 도서관들은 도서관의 제한적인 이용이 염려되어 장서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sup>11)</sup>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장서의 안전이 이용보다 더 중요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1943년 폭격전쟁이 학문과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서부터는 모든 도서관마다 장서를 대피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칼리시(Kalisz)의 경우 거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파괴되었고, 책들은 빗물이 모여 흐르게 만든 하수도를 채우는데 사용하기도 했다.<sup>12)</sup>

### 3. 나치시대 도서관 사서

나치정권이 들어서기 전, 독일도서관에는 100명의 유대인 사서(남자 73명, 여자 23명)가 근무하고 있었다.<sup>13)</sup> 1933년부터 사서직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유대인들은 시민으로서 사회적·법적

10) W. Schmidt, "Die Verlagerung der Bestehende im Zweiten Weltkrieg und ihre Rueckfuehrung," Deutsche Staatsbibliothek 1661-1961, Bd.1, Geschichte und Gegenwart, Leipzig, 1961, p.79.

11) P. Kittel, "Bestanden aus der frueheren Preussischen Staatsbibliothek in Polen," *Preussischer Kulturbesitz*, Band XXIX, Berlin, 1993, p.114.

12) Janasz Dunin, "The tragic fate of Polish literature after 1939," *Salanus*, 10, p.8.

13) A. Mueller-Jena, "Zwischen Ausgrenzung und Vernichtung: juedische Ninliothekare im Dritten Reich," *Bibliotheken waehrend des Nationalsozialismus*, hrsg. v. P. Vosodek u. M. Komorowski(Wiesbaden : Harrassowitz,

권리를 조직적으로 박탈당했다. 공무원이었던 유대인들은 해직되었으며 유대인과 결혼한 사서들은 도서관을 떠나야 했다. 그들은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처럼 도서관 직원의 도움으로 사서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서도 있었지만 반대로 내부자의 고발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 그러나 어렵게 사서직을 유지하던 유대인 사서들은 1935년 뉴렌베르그 인종차별법이 공포된 후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도서관과 극장을 포함한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아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났다. 유대인들의 사업은 거부당하고 폐쇄되었다. 많은 독일인들은 사업을 아리안화 하거나 혹은 같은 직종에서 경쟁자를 제거함으로써 이익을 챙겼는데 이러한 현상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났다.

민족사회주의노동당(NSDAP), 소위 나치당과 사서직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서의 정치적 이념, 즉 사서의 나치당적 여부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사서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사서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전문성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나치시대의 독일 도서관에서는 정치적인 이념을 이유로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해직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고급주제전문사서의 경우에는 1938년부터 나치 당적은 필수 사항이었다.<sup>14)</sup>

#### 4. 나치시대 조직적인 장서 약탈

나치 정부는 점령지역의 장서를 조직적으로 탈취하기 위해 전쟁 본부로서의 역할을 했던 제국보안국(Reichsicherheitshauptamt : RSHA)에 도서관 부서를 두었다. 이 RSHA는 게슈타포와 보안국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전쟁 수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기도 했다. 이곳의 도서관은 RSHA 산하 유사 학술연구 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책들을 공급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여기서 관리하던 책만도 200만권이나 되었다.

히틀러 정책의 범위에는 유대인, 파시스트, 반독일자료, 민족주의와 휴머니스트의 세계관을 부추기는 자료들을 소장한 도서관들을 없애려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반면에 귀중본의 탈취를 위해 독일 군대가 진격한 곳에서는 도서관의 장서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그 예로 독일 외교부의 소련 특별대대 담당관은 독일 군대가 침공하는 도시에서 항복을 받아내자마자 곧바로 필사본, 고문서, 책들을 압수하라는 지시를 내려 자료들을 챙겼다. 문화재 탈취의 책임자는 나치당의 철학적 지도자인 알프레드 로젠베르그(Alfred Rosenberg)였다. 로젠베르그 특수부대(Einsatzstab Reichsleiter Rosenberg : ERR)는 독일이 점령한 국가의 문화유산과 예술품을 독일의 문화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역할을 위해 설립된 특별 기관들 중 하나로 고가의 책들과 예술

1992), Teil.2, p.229.

14) 노문자, "도서관의 이데올로기화 과정에 관한 연구 - 구동독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1호(2003. 3), p.213.

품들을 탈취하여 독일로 보내는 임무를 맡았다. ERR은 매우 조직적으로 모든 독일의 점령 지역을 샅샅이 뒤져 유대인, 슬라브족, 프리메이슨, 공동체들의 고문서들을 찾아내서 몰수하였다.

나치 정부의 유대인 학살, 일명 홀로코스트와 유대인 장서의 무지비한 파괴와 약탈은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사건의 연속이었다. 나치 정부는 주로 유대인의 고급시설, 랍비 학교, 유대인 교육시설과 연구소, 시나고그, 유대인 청년들과 관련된 유대인도서관을 약탈과 파괴의 목표로 삼았다. 독일은 자치지구나 주(州), 대학의 장서에 있는 유대인 자료들에 대해 권리를 주장했으며, 특히 유대인 부자들의 개인도서관, 유대인 학자나 문헌수집가의 장서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대인의 책은 그들을 숙청하면서 불태웠고, 유대인의 출판은 금지되었다. 그리고 미술품 수집과 문화 공연은 점점 독일화 되어갔다. 즉, 유대인 예술가와 작곡가, 드라마 작가의 작품은 금지되었고 유대인 공연자는 독일 대중 앞에 서는 것이 금지되었다. 유대인의 공예품과 책, 수백 개의 시나고그와 학교가 파괴되었는데 그 당시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유대인 주민센터의 책 16,000권도 함께 사라졌다.<sup>15)</sup>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유럽유대인문화재건위원회에 따르면 1933년에는 1,000권이 넘는 장서가 469개 있었는데 전쟁 후에는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sup>16)</sup> 도서의 운명처럼 유대인도 마찬가지였다. 독일은 유대인의 학살 목표치를 1,400만으로 잡았고, 그들 중 600만 명이 학살되었다. 폴란드에서는 90%의 유대인과 70%의 책이 사라졌다.

### III.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협약과 독일도서관 환경

#### 1.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사회에서 문화재는 국가적 위신이며 국부의 상징이다. 문화재는 민족의 과거를 증명하는 확고한 물증이 된다. 1815년 나폴레옹은 워터루 전쟁에서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하여 그의 천하를 마감하였다. 일반적으로 패전국은 전승국에 대한 권리가 매우 한정되어 있었지만 나폴레옹을 격퇴한 웰링턴 장군은 약탈 예술품을 원래 소유국가로 반환할 것을 영국 정부에 건의했다. 연합국 대표들은 루브르박물관을 점령한 뒤 예술품들을 접수했다. 패전국 프랑스가 전승국에게 약탈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랑스는 단지 약탈한 문화재만을 반환했고 전승국들도 이에 대해 더 이상은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모든 예술품들은 그것이 창조된

15) L. E. Hill, "The Nazi attack on un-german literature 1933-1945," *The Holocaust and the book*, ed. J. Roso (Amherst Univ. of Massachusetts Pr., 2001), p.30.

16) Dov Schidorsky, "Confiscation of libraries and assignment to forced labor: two documents of the Holocaust," *Libraries & cultures*, 33, N.4(1998), p.357.

원래의 장소에, 그 창조자들이 의도한 원래의 환경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빈 회의”의 원칙이 향후 국제적 관습법으로 정립되어 갔다.<sup>17)</sup> 그 후 1907년 문화재의 몰수를 금지하는 헤이그협약, 식민 통치의 과실인 문화재는 반드시 반환되어야 한다는 1919년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베르사이유조약, 냉전시대 1954년 전시문화재보호협약(헤이그협약) 등이 발표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문화재 반환문제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러 유엔과 유네스코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식민통치시대에 반출된 핵심적인 문화재를 돌려줄 것을 권고하는 결의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1973년 유엔총회는 ‘수탈의 희생국들에 대한 문화재 반환에 관한 권고’를, 1979년 유엔총회는 ‘문화재의 원래 소유국가에로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비록 이러한 권고와 결의에 구속력이 없고, 거의 모든 서유럽 국가들 이외에 미국과 일본도 표결에 기권했지만 이 회의는 국제사회에서 식민지 문화재 반환의 윤리적 당위성을 확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18)</sup>

## 2. 전쟁 후 독일도서관 상황

전쟁 후 독일도서관은 크게 도서관 건물의 파괴에 따른 장서의 손실, 다양한 목록의 손실, 전문 인력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 재건해야 했다.

그 당시 국가도서관이었던 베를린국가도서관의 건물은 단지 1층만이 남아있었고, 바이에른 국가도서관은 도서관 건물 날개 7개 중에서 2개만 남아 있었으며 드레스덴의 작센 주립도서관은 지하실까지 파괴되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도서관들이 엄청난 건물과 장서의 피해를 입었다.

도서관 건물과 장서의 피해 이외에도 도서관 목록의 손실은 당장의 이용자 서비스에 영향을 주었다. 함부르크 대학도서관, 칼스루헤(Karlsruhe) 주립도서관, 라이프치히 시립도서관의 목록은 완전히 소진되었고, 베를린의 프러시아 국가도서관의 열람용목록은 분실되었으며, 특히 그 당시 독일 종합목록을 위한 준비목록은 사라져버렸다.<sup>19)</sup>

도서관 재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부족은 전쟁과 새 국가의 건설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에서 야기되었다. 첫 번째 이유로 많은 사서들이 전쟁 동안 민간인 혹은 군인으로 참전하여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특히 예나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던 12명의 사서는 도서관장 로크만(Lockmann)까지 모두 포함하여 1945년 도서관에서 폭격으로 사망했다.<sup>20)</sup> 두 번째 이유는 사서들이 전쟁포로가

17) 김경임,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서울 : 홍익, 2009), pp.113-114.

18) 상계서, pp.147-148.

19) Georg Leyh, *Die Lage der deutschen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nach dem Krieg*(Uppsala : Almquist & Wiksells, 1947). p.59.

20) Victor Burr, "Aus dem ersten Jahr der Zerstörung der Universitätsbibliothek Jena," *Weite Welt und breites Leben, Zeitschrift fuer Bibliothekswesen*, Beih.82(1966), p.65.



되었고, 세 번째 이유로는 사서들의 고향이 폭격을 당해 귀향할 의미가 없어져버렸다. 네 번째로 일부 사서들은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병이 들어 도서관 근무가 불가능하였다. 다섯 번째는 연합군의 승리세력에 의한 도서관의 탈나치화 과정에서 사서들은 그들의 사상적 동기로 인해 도서관에서 해고되었다.<sup>21)</sup>

전쟁 후 특히 동독에서는 공공행정부에서 과거 나치시대의 잔재를 제거하는 정화작업에 착수하였다. 라이프찌히 대학도서관에서는 직원 57명 중 22명이 나치 당원이었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의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베를린국가도서관에서는 160명의 직원 중에서 65명이 해고되었고, 그 외 동독의 대규모 주립도서관과 학술도서관에서도 직원의 45%가 해고자 명단에 포함되었다.<sup>22)</sup>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정화작업의 결과는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

### 3. 독일 통일 전까지 약탈도서 반환을 위한 환경

2차 세계대전 이후 약탈된 문화재의 반환 작업은 서독 연합군에 의해 주도되었다. 전쟁 직후의 독일도서관의 약탈장서 반환 사업은 매우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점령군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독을 점령했던 연합국들은 약탈문화재에 관해서 그들 국가의 법률을 고수했기 때문에 점령지역마다 각국의 약탈문화재의 반환법이 적용되었다. 미국의 약탈문화재 반환법은 1933년 1월 30일에서 1945년 5월 1일 사이에 약탈된 재산은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탄압받았던 사람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와 영국연합군도 그들 국가의 반환법을 실시하였지만<sup>23)</sup> 소련군 점령지역에서는 반환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세 연합국의 약탈문화재 반환에 관한 법률은 모두 문화재의 현재 소유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었다.

미군 점령지역에서는 주인 없는 책들의 수집과 반환을 위해 오펜바흐 문서 보관소(Offenbach Archival Depot : OAD)가 설립되어 1946년 3월 12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OAD는 나치시대 때, 유대인에 관한 자료와 유대인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한 유대인연구소인 Hohen Schule의 자료로 채웠다. OAD 직원들의 주요 임무는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종류를 분류하며 반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1946년 3월에서 1949년까지 거의 200만 권에 달하는 서적이 프랑스, 벨기에, 영국, 이태리, 헝가리, 그리스, 폴란드 등에 반환되었다. 후게우드(Hoogewoud)에 따르면

21) *Ibid.*, p.65.

22) M. Komorowski, "Die Auseinandersetzung mit dem nationalsozialistischen Erbe in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swesen nach 1945," *Bibliotheken waehrend des Nationalsozialismus*, Teil.II(1992), p.280.

23) J. Lilltecher, "Westdeutschland und die Restitution juedischen Eigentums in Europa," *Raub und Restitution: 'Arisierung' und Rueckerstattung des juedischen Eigentums in Europa*, hrsg. von Costantin Goshler und Philipp Ther. (Ff. am. Maim. Fischer Taschenbuchverlag), p.95.

미군들이 반환한 서적이 도서관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한다.<sup>24)</sup>

전쟁 직후 50년대 독일의 도서관들은 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일까? 불행 과거사를 마주하는 일은 독일도서관에게도 쉬운 것이 아니었다. 국가사회주의 말기에는 도서관 직원 역시 나치의 동조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꺾에 빠졌었던 것으로 간주하였고, 또 스스로를 희생양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주저하였다.<sup>25)</sup> 또 한편 전쟁 후 도서관은 그들이 입은 피해로 인해 도서관 건물의 재건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 결과 도서관 소장도서에 대한 투명한 관리는 불가능하였다고 변호했다.

약탈도서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 배경에는 유대문화재건위의 요구에 대한 독일도서관들의 반발심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한 예로 1947년에 이미 한 도서관 직원이 유명한 가문의 약탈도서를 대학도서관에서 발견하였다. 당시 도서관장은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20년 후 한 직원에 의해 이 개인 소장물들이 다시 눈에 띄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유대문화재건위의 요구가 이미 20년 전에 있었지만 도서관장들은 여전히 어떠한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1955년 5월 5일 연합군의 독일 점령이 끝나자 독일은 그들의 독일약탈재산반환법(BRueG)에 연합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sup>27)</sup> 재산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독일 보상법(BEG)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은 생명, 신체 혹은 건강, 자유, 사유재산, 그리고 직업적 혹은 경제적 발전에 대한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보상하는 것이었다. 인종, 종교, 정치 혹은 세계관을 이유로 국가 사회주의의 탄압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그 당시 약 530억 DM가 보상액으로 지불되었으며 그 중 25%가 사유재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었다.<sup>28)</sup>

#### IV. 과거사 극복을 위한 독일도서관의 활동: 약탈도서 출처 조사

극복할 수 없는 과거는 무엇인가? 과거사를 극복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사 극복이란 교육학적으로 보면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의미이다. 독일도서관들은 그들의 과거, 즉 나치시대 만행의 잔재인 약탈도서를 아직까지도 소장하고 있다. 독일도

24) F. J. Hoogewood, "The Nazi looting of books and its american Antithesis," *Studia Rosenthalia*, 26(1992), p.168.

25) S. Wiedemann, *Vergangenheitsbewaeltigung in deutschen Bibliotheken: vom Umgang mit geraubten Buechern aus der Zeit des Nationalsozialismus*(Berlin : Humboldt-Universitaet zu Berlin, 2008), p.40.

26) *Ibid.*, p.41.

27) G. Schnabel and M. Tatzkow, *Nazi looted art*(Berlin : Proprietas- Verl, 2007), p.106.

28) *Ibid.*, p.106.

서관들은 일반 독일 국민들과 달리 그들의 과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현재 소장하고 있는 약탈도서를 반환하는 길 일 것이다. 그러나 약탈 문화재 반환은 어려운 협상과 토론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전쟁이 끝난 후 60여년, 즉 21세기에 들어와서 의식이 있는 독일 도서관인들이 약탈도서를 반환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1. 워싱턴 선언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공산주의국가의 체제 몰락 이후 90년대 초에 나치시대 희생자들의 몰수 재산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었다. 동독은 소련의 점령 하에 있었기 때문에 나치의 범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동독에서는 여전히 약탈 문화재의 청산에 대한 요구가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언론인들은 스위스 은행들을 상대로 살해된 유대인들의 계좌와 보험 청구권을 제기하였고 또 나치정권 희생자들의 상속자들은 약탈 예술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19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 외무부는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과 공동으로 홀로코스트시대의 자산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44개 국가와 13개의 비정부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국가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루마니아, 그리스 등이었고, 비정부 조직으로는 유럽 유대인의회, 세계 유대인의회, 세계 유대인 복구조직 등이었다.<sup>29)</sup>

워싱턴회의의 주최자였던 미국 국무총리 에이젠스택(Eizenstat)은 개막 연설에서 회의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리는 지난 세기의 가장 끔찍하고 가장 반성할만한 사건의 마지막 장을 집필해야만 더 자유롭고 더 위엄 있는 다음 세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sup>30)</sup> 그는 이 발언을 통해 20세기의 불의가 청산되기 전에는 세계가 21세기로 진입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유대인들의 약탈된 재산과 그 반환에 관한 토론을 거친 후 회의의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

워싱턴 회의의 마지막에 나치의 약탈 예술품에 대한 원칙들이 거론되었는데 독일에서는 ‘워싱턴 선언’으로 표현되었다. 이 선언의 골자는 약탈국들이 약탈된 예술품을 그들의 소장품에서 찾아내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마련하며, 연구를 위해 소장 기관을 개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상속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참가국들에게 “워싱턴 선언”에 준하는 법적 근거를 그들의 나라에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비록 선언문은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이었지만, 회의 참가자들은 국가사회주의에 의해 몰수된 도서관과 문서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그 과정에서 문화재의 몰수

29) <<http://www.state.gov/regions/eur/holocaust/heacappen.pdf>>.

30) Opening Statement of Washingtoner Konferenz(Jan. 2008), p.43.  
<<http://fcit.usf.edu/Holocaust/resource/asset/heac1.pdf>>.

과정과 약탈된 책들을 색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출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워싱턴 회의는 나치 범죄의 청산에 대해 많은 토론과 활동을 촉발시켰다. 그 결과 참가국들은 박물관, 도서관, 문서관에서 약탈된 문화유산의 색출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들을 마련하였다. 독일에서는 워싱턴으로부터의 제안을 소위 '공동 선언'을 통해 현실화했다.

워싱턴선언의 마지막에는 약탈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수집되는 약탈문화재중앙관리본부(Koordinierungsstelle fuer Kulturgutverlust: KK)의 설립을 촉구하였다.

1998년 "워싱턴 선언"이 통과되고 나서야, 독일 도서관들은 전쟁이 끝난 지 53년 만에 그리고 유대인 재건위의 요구가 있는 지 48년 만에, 약탈된 도서들을 찾아내고 필요한 경우에 되돌려 주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 2. 공동선언문<sup>31)</sup>과 가이드북

1999년 12월 14일 연방정부, 지방자치주들 그리고 지역대표회의는 나치의 탄압으로 몰수된 문화재, 특히 유대인들의 사유재산을 찾아내 돌려준다는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공동선언문은 인터넷을 통해 참여 기관들에게 약탈도서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약탈 문화재의 소유권자들이 그들의 소장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도 세웠다.

2001년 2월 워싱턴 선언과 공동선언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가이드북이 소개되었다. 이 가이드북은 나치시대의 약탈 문화재를 찾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또 밝혀낸 약탈문화재의 원래 소유권자나 소유기관들에게 이를 반환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도서관에서 그들의 약탈도서를 검증하는 데는 도서원부나 신착도서목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가이드북에 의하면 약탈도서의 출처 연구, 즉 원래 소유자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된 인쇄목록, 전문서적, 관련문서 기록을 조사하라고 권하고 있다.

다음은 나치시대 약탈문화재를 찾아내는데 적용하는 체크리스트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sup>32)</sup>

- 무엇? : 예를 들어 유대인의 문화재가 분명한 경우
- 언제? : 취득 시기, 특히 1933-1945
- 어디서? : 취득 장소, 예를 들어 독일이 점령한 국가, 전당포, 유대인 중앙집결소, 유대인 물품 경매소, 수용소

31) Erklaerung der Bundesregierung, "der Laender und der kmmunalen Spitzenverbaende zur Auffindung und zur Rueckgabe NS-verfolgungssbedingt entzogenen Kututrgutes," insbesondere aus juedischem Besitz vom 14 Dez. 1999.

32) Handreichung zur Umsetzung der Erklaerung der Bundesregierung, "der Laender und der kummunalen Spitzenverbaende zur Auffindung und zur Rueckgabe NS-verfolgungsbedingt entzogenen Kulturgutes," insbesondere aus juedischen Betiz vom Dez. 1999, <<http://www.lostart.de/stelle/handreichng>> [cited 2010. 3. 10].

- 어떻게? : a) 취득 방법, 예를 들어, 본문에서 제시한 의심 사례에 해당하는 매매, 교환, 증여  
b) 목록의 표기 방법
- 누구로부터? : 출처: 나치 몰수 문화재를 취급하던 상인과의 거래를 통해, 국가 기관으로부터 이전, 원 소유자의 이름

위의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나온 연구결과는 KK에 보고되어야한다.

이 가이드북은 약탈된 문화재를 찾아낼 의사가 있는 기관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3. 하노버촉구서

2002년 11월 14일 약 200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제 1회 하노버 심포지엄을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 의회와 니더작센 주립도서관이 주최하였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유대인 약탈 문화재의 색출과 반환에 대한 중요한 문화 정치적 토론을 촉구하였다.<sup>33)</sup>

전문가들은 유대인 약탈서적의 색출과 반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약탈 도서 색출 작업을 진행 중이던 전문가들은 그들의 연구 현황과 연구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에 대해 보고하였다. 라이펜베르크(Reifenberg)는 마부르크(Marburg) 대학도서관에서 나치시대 약탈도서의 조사 과정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였으며, 베른트 폰 에기디(Berndt von Egidy)는 케사르 히르쉬<sup>34)</sup> 도서관에서의 약탈장서의 색출과 반환 작업에 대해 보고하였다.

심포지엄을 마치면서 참가자들은 “하노버촉구서”를 발표하였다. 촉구서는 독일도서관에는 아직도 나치에 의해 압수된 도서가 여전히 파악되지 못한 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도서관, 도서관 협회, 도서관 관련 교육기관(사서교육, 문서관), 다양한 학술 기관들에게도 “공동선언문”의 실천에 동참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노버촉구서는 도서관들에게 약탈도서 선별 작업을 지지하고,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역사적인 연구에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촉구서는 약탈도서의 출처를 밝히는데 경험이 있는 브레멘(Bremen) 국립대학도서관과 마부르크 대학도서관의 정보를 공유하여 도움이 되도록 권하고 있다. 또한 약탈도서를 소유하고 있는 도서관들에게 약탈도서의 출처를 밝혀내는데 필요한 기금을 신청하고, 본 프로젝트

33) Juedischer Buchbesitz als Raubgut: 2. Honnoversche Symposium/ im Auftrag der Gottfried-Wilhelm-Leibniz-Bibliothek- Niedersaechische Landesbibliothek und Stiftung Preussischer Kulturbesitz hrsg.von R.Dehnel. Ff. a.Main Klostermann, 2006, p.5.

34) Caesar Hirsch는 유대인 의사로서 사설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1933년 게슈타포에 의해 그의 장서는 약탈되었다. 약탈 장서는 1939년 Tuebingen 대학도서관으로 넘겨졌다. 1991년 신문기자 Hans Joachim Lang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http://www.archiv.ub.uni.heidelberg.de>>.

트의 실현을 위해 각 도서관들이 각자 문화계와 정치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후원자들을 설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노버 심포지엄의 참가자들은 도서관 관련 교육기관들이 그들의 교과과정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기술한 도서관 역사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촉구서는 출처가 확인된 약탈도서의 목록을 전시회와 같은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보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 4. 테레지엔선언(Theresienstadt Erklaerung)<sup>35)</sup>

2009년 6월 체코 총리의 초청으로 프라하와 테레지엔시에서 4일 동안 46개국의 유대인 문제 전문가들과 NGO 대표들이 나치시대에 살아남은 유대인과 그 시대 이념적으로 폄박을 받았던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부동산, 약탈 문화재, Judaica 등의 반환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이 국제 회의에서 약탈도서와 관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의 참가국들과 국제기구들은 해당 국가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약탈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접근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시켜야 하고
2.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기타의 국공립 및 사립 문서관에 소재한 사료들의 출처를 밝히고 이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약탈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각 국가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적합한 주인, 개인 혹은 기관에 돌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행하며, 토라 경전을 비롯해 몰수의 대상이 되었던 유대인의 문화유산을 국제 사회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이 테레지엔 회의에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영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약탈 문화재에서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이태리,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참여하였다.

#### 5. 카이로국제회의

위에 서술된 문화재 반환을 위한 선언문이나 촉구서들은 주로 나치시대에 탈취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가장 최근의 이 카이로 문화재 환수 국제회의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중국, 인도 등 22개 유물 피탈국들의 모임으로 카이로에서 2010년 4월 7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이집트가 주최하였다.<sup>36)</sup> 그동안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해 개별적인 활동을 펼쳐

35) Lost Art Internet Database Home page, <<http://www.lostart.de>> [cited 2010. 3. 1].

36) "한국 등 유물피탈 22개국 '환수 공조'," 서울신문 2010년 4월 10일자 기사.

은 문화재 약탈 피해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책을 논의한 첫 회의라는 의미를 갖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문화재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주요국들이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만 이번 회의의 합의에 따라 이집트 등 22개국은 공동으로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 나갈 예정이어서 국제적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국제회의의 참가국들은 각국이 우선순위를 원하는 주요 반환요구 유물 목록(wish list)을 작성했다. 의장을 맡은 이집트 문화재청장 하와스(Hawass)는 7개국이 우선 순위를 위해 환수 문화재 목록을 제출했고, 다른 나라들은 본국의 협의를 거쳐 목록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와 일본 국내청에 있는 조선왕실 도서를 우선 환수 대상 목록에 올렸다.<sup>37)</sup>

## 6. 도서관의 약탈도서를 찾아내기 위한 지침서

약탈 도서를 찾는데 필요한 가이드북, 제안, 조언들은 도서관들에겐 너무 개략적이었다는 판단 아래 역사학자이자 도서관학자이며 마부르크 대학도서관에서 나치 약탈도서에 대한 연구로 경험을 쌓은 알브링크(Albrink), 브레멘(Bremen) 국립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 연구팀장 바벤드라이어(Babendreier), 2001년부터 마부르크 대학도서관에서 소장도서 연구를 하고 있는 라이펜베르크(Reifenberg) 세 사람은 가이드북을 보충하는 지침서를 만들었다.

지침서는 도서관의 소장도서들에서 약탈도서를 찾아내려고 시도하는 도서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찾아 나서며, 그 연구 결과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독일도서관에서 약탈도서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복잡적이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지침서의 도입부에 언급되었듯이, 책이란 고유한 개별 물건이 아니다. 소유자의 인장이나 Ex libris 혹은 손으로 적어 넣은 이름 등에 의해 고유성을 띠고 있어 원래의 소유자를 밝혀내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sup>38)</sup>

지침서의 시작 부분에는 색출 대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어떠한 나치 약탈 문화재들이 독일 도서관에 존재하고 있는가? 지침서는 불법적으로 독일도서관의 소유가 된 책들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1. 압수된 책들, 2. 유대인 혹은 탄압받던 개인들로부터 빼앗은 소유물들, 3. 탄압의 희생자들의 소유물 중에서 비자발적으로 매각된 도서, 4. 제 2차 세계 대전 중 점령 지역에서 노획된 것들.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책을 찾아내는 방법도 차별화된다. 1933년 이래 공공기관이

37) “국가 기록물부터 왕의 공부책까지 ... 조선왕실의례 등 고서 4678권 일본에,” 매일경제 2010년 3월 23일자 기사.

38) Bearbeitet von, *Leitfaden : fuer die Ermittlung von NS-verfolgungsbedingt entzogenem Kulturgut in Bibliotheken*, Die Suche nach NS-Raubgut in Bibliotheken: Recherchestand, Probleme, Loesungswege. hrsg. 2006, <<http://www.ub.uni-marburg.de/allg/aktiv/Leitfaden.pdf>>.

안전하게 보관하여 도서관에 전달된 압수 도서들에 대한 정보는 도서관의 도서원부를 보면 알 수 있다. 도서수입처의 난에 약탈도서를 관리했던 기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책을 구분하기가 쉬워진다. 유대인과 정치적, 이념적으로 탄압 받던 사람들의 몰수재산의 경우, 그 주인이 추방되었거나 수용소로 이송된 후 뒤에 남겨진 것들은 재무관공서에서 처분한 것들이다. 골동품상이나 경매 혹은 베를린 물물교환센터를 전전하다 결국 도서관으로 흘러 들어온 책들의 경우는 그들의 출처를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sup>39)</sup>

나치의 인종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매각해야만 했다. 그들의 책도 골동품상을 거쳐 도서관으로 흘러 들어왔다. 약탈 서적의 마지막 카테고리는 독일이 그들의 점령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약탈을 단행하여 취득한 책들이다. 이러한 책들은 취득 방식과 동기에 따라 약탈물 또는 전리품으로 분류되었다. 나치의 인종 말살 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획득된 것들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약탈물에 속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책들은 전리품으로 분류되었다. 도서관에서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책을 모두 찾고자 하였다.<sup>40)</sup>

이 지침서의 첫 관문은 어떤 책을 대상으로 찾아 나서야 할 지 규정한 후, 다음 단계에서는 인종 말살 정책과 연관된 책을 어떻게 구분해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도서원부, 신착 도서목록, 계산서, 연감, 카탈로그 등은 약탈서적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출처들이다. 지침서에서는 신착 도서목록의 구성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어떤 기록 내용이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그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경찰서를 거쳐 왔다거나, 나치 체제에서 금서로 분류되었던 서적이 그 예이다. 지침서는 출처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아예 없을 때의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카탈로그나 누구의 컬렉션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41)</sup>

약탈 서적을 찾아낼 수 있는 다음 단계는 도서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책에 찍힌 등록 번호를 확인하고, 원래 주인의 표시 혹은 헌사 등을 찾아보아야 한다. 지침서는 이 경우와 관련해서 도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기술하고 있다. 도서의 원 소유자의 이름을 밝혀내기가 늘 쉬운 것은 아니며 그 이름을 통해 소유자가 유대인이었는지 혹은 약탈된 책인지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약탈 도서를 소장 했던 단체의 표시는 반면에 보다 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대인 기관, 노조 혹은 다른 피탄압 단체의 소유 표시가 발견되면 이 경우는 분명히 약탈 도서라고 확증할 수 있다.

지침서는 약탈 도서의 출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문서화하고, 또 이 정보가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탈 문화재에 대한 정보의 접근을 위해서 지침서는 KK의 Lost Art Internet-Database를 언급하고 있다.

39) *Ibid.*, p.4.

40) *Ibid.*, p.5.

41) *Ibid.*



지침서는 약탈 도서의 조사를 위해 먼저 도서에 관한 서지사항 즉 저자, 서명, 판사항, 총서의 권수,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에 이어서 도서등록번호, 등록날짜, 구매 장소 및 가격 등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약탈 도서의 출처에 관한 정보다. 도서관은 그 책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으며 누구에 의해 도서관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전의 소유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점이다. 약탈 도서의 전달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진술과 함께 적혀 있어야 한다. 도서관들은 약탈도서에 관한 데이터를 작성할 때 도서관 내부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를 해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약탈 도서가 분명한지, 아니면 단지 의심 대상인지 혹은 약탈 도서가 아님이 확실히 증명된 것인지, 또한 그 책이 나치 시절 금서였는지, 혹은 그 책의 데이터가 Lost Art Internet-Database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 약탈도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완전한 문서화를 위해서는 도서에 찍힌 장서인, Exlibris 혹은 손으로 쓴 헌사 등의 소유 표시 들이 디지털 데이터로 함께 저장되어야 한다.

도서관들이 약탈도서의 구입 경로와 소유자를 밝혀내고 난 후에는 합법적인 주인을 찾아내어 그 책을 반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침서에는 책의 원주인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정리해 놓았다.

약탈된 도서들이 합법적인 원소유자에게 돌아가기 전에, 법적 소유권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약탈 도서에 대한 반환 요청이 이미 있었는지, 소유자가 정말로 탄압받았던 사람인지, 그리고 보상이 이미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2)</sup>

## 7. 약탈문화재중앙관리본부(KK)

1994년 독일 지방자치주들은 브레멘에 문화재 반환을 위한 중앙관리 본부를 설립하였다. 당시 이 기관의 우선 과제는 전쟁으로 실종 혹은 손실된 문화재들을 밝히고 반환하는 것이었다. 1997년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주가 이 중앙본부의 업무를 이어 받았으며, 1998년 이후에는 작센-안할트 주의 문화부에 소속되어 모든 자치구의 지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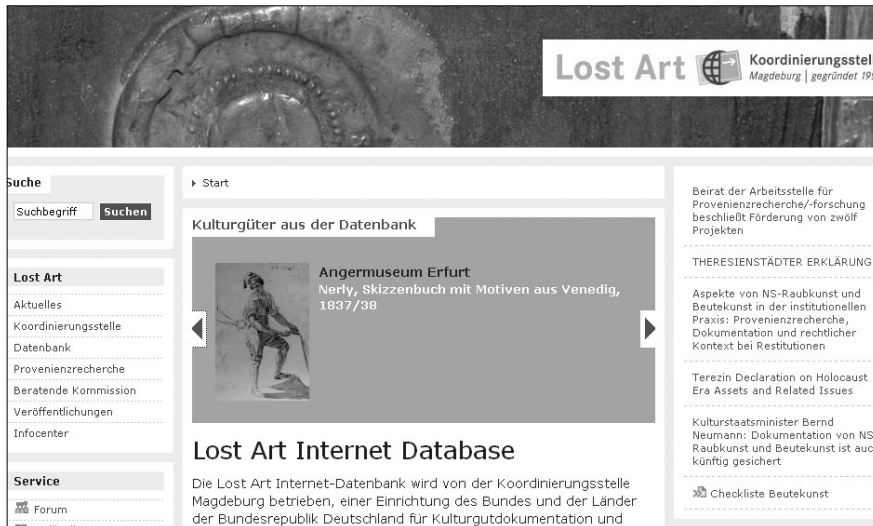
워싱턴선언에서 약탈문화재를 공동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약탈문화재중앙관리본부의 설립이 제안되었다. 또 공동선언문에서는 약탈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이 자신의 소장품 리스트를 등록하고 약탈 소장품에 관한 합법적 청구권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는 권리자들이 검색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인터넷 서비스에는 전쟁 중 외국으로 옮겨진 문화재의 목록도 공개될 예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버추얼 정보 포럼(Visual Information Forum)이 마련되어 참여 기관들과 제 3자가 자신의 작업과 경험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

42) Ibid., p.19.

이었다. 이러한 업무를 막테부르크(Magdeburg)에 있는 약탈문화재중앙관리본부가 넘겨받았다.

공동선언문을 통해 2001년부터 KK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때부터는 나치의 탄압으로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자료들의 문서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명목으로 KK의재원은 연방정부가 예산의 50%를 책임지고 그 나머지 반을 지방자치주들이 부담한다.<sup>43)</sup>

KK에서는 도서관의 약탈도서의 소장기록이나 검색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Lost Art Internet-Database를 구축하였다.<sup>44)</sup> Lost Art Internet-Databanke는 약탈 도서의 소장에 관한 정보와 또한 약탈된 도서를 찾는 기관에 관한 정보의 저장을 위한 정보은행이다. 이 DB는 약탈 문화재에 관한 전문(full text)검색이 가능하고, 또 약탈도서의 소유자 스탬프 같은 그림 파일도 첨부할 수 있게 하였다.<sup>4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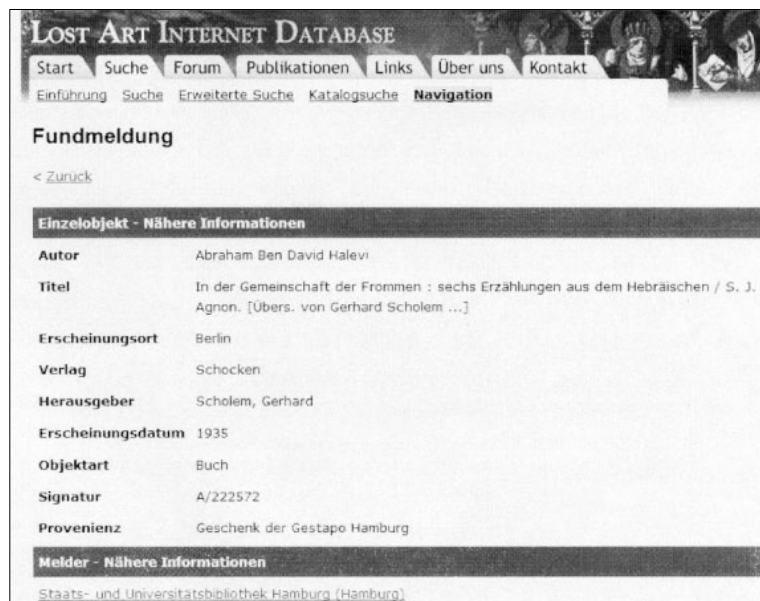


<그림 2> Lost Art Internet Database

여기에는 약탈 도서의 소장에 관한 정보와 약탈된 도서를 찾는 기관 또는 개인에 관한 모든 기본 정보, 그들의 주소나 담당자 등의 일반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DB는 약탈 도서에 관한 이들 기관의 연구 프로젝트도 소개하고 있다. “Objektgruppen(대상그룹)”에는 <그림 3><sup>46)</sup>과 같이 약

43) A. Baresel-Brand, “Verantwortung wahrgenommen,” Kulturverluste, Provenienzforschung, Restitution: Sammlungsgut mit belasteter Herkunft in Museen, *Bibliotheken und Archiven*. (Muenchen, Deutscher Kunstverlag). 2007. p.60f.  
 44) Lost Art Internet Database Home page, <http://www.lostart.de> [cited 2010. 4. 10].  
 45) U. Hartmann, “Das Internetportal www.lostart.de- Ziele und Moeglichkeit,” Kulturgutverluste, Provenienzforschung, Restitution : Sammlungsgut mit belasteter Herkunft in Museen, *Bibliotheken und Archiven*. (Muenchen, Deutscher Kunstverlag). 2007. p.68.

탈 도서의 출처를 밝혀낸 정보와 또 찾고자하는 약탈도서의 목록이 나와 있다. 약탈도서의 저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등 도서 자체에 대한 정보 외에도 대상 문화재, 즉 이 경우에는 “책”에 대한 연관 정보와 출처 등을 검색할 수 있다. KK는 그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약탈 문화재를 주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기관을 위해 토론과 대화를 위한 포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이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록할 수 있는 메일링 리스트도 마련하였다.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내용도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약탈문화재 연구와 약탈도서 반환이라는 주제에 있어 이 분야의 경험을 교환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 교환과 토론이 없으면 이중 연구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도서관에 흩어져 있는 전집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그림 3〉 출처가 밝혀진 도서 정보

KK는 Lost Art-Database와 포럼 외에도 나치시대의 약탈 및 전리품이라는 주제와 연관되어 출판된 도서의 목록, 신간, 일반적인 참고도서 혹은 법적 측면에 관한 정보도 인터넷 상에 공개하고 있다.

KK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최근에 출처연구(Provenienzrecherche)란이 추가되었다. 여기에 제공된 약탈 문화재의 리스트는 더욱 광범위한 최신 정보와 출판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46) Lost Art Internet Database Home page, <http://www.lostart.de> [cited 2010. 4. 10].

유대인 수집가와 예술작품 거래상들에 대한 인물 데이터가 알파벳 순서로 저장되어 있으며, 1933년에서 1945년 사이에 있었던 문화 예술 경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기에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문화재 약탈 행위를 벌였던 부서와 책임자들의 리스트와 문화재 약탈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명령이 시행된 시점, 그리고 그 반환 노력에 있어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리스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 법률이나 명령은 PDF-데이터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출처 연구에 <그림 4>와 같은 체크 리스트<sup>47)</sup>도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약탈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소장 목록이 어디 있으며, 이를 어떻게 구별하고 문서화하고 등록하는지 등 중앙 관리 본부의 모든 연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4> 약탈도서 출처 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Lost Art-Database 에는 2009년까지 12개의 도서관에서 18,391개의 약탈 문화재에 대한 정보가 올라와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도서이고 가끔 악보 및 기타 저작물들도 포함되어 있다.<sup>48)</sup>

2006년 말에는 Objektart란에 등록된 도서가 14,000 권이었다. 단 1년 만에 4,000권의 새로운 도서가 등록되었다. 또 2009년 11월 6일에서 2010년 2월 12일 사이에만도 65건이 등록되었다.<sup>49)</sup> 여기에 등록된 도서들은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합법적인 소유권자에게, 또는 소유기관에 반환되고 있다. 또 소유권자가 개인 일 경우 다시 도서관에 기증을 하는 경우도 있다.

2009년 11월 연방정부의 보도자료국은 KK가 나치시대 약탈문화재의 출처 연구와 반환에 관한 21

47) Lost Art Internet Database Home page, <<http://www.lostart.de>> [cited 2010. 3. 10].

48) Lost Art Internet Database Home page, <<http://www.lostart.de/recherche/nav>> [cited 2010. 1. 7].

49) Lost Art Internet Database Home page, <<http://www.lostart.de>> [cited 2010. 4. 6].

개의 프로젝트를 상정 한 결과 16건의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 수행 기관들은 그들의 연구를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받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박물관, 도서관, 문서관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었다. 반면 지방자치의 주, 시, 군 단위의 재정 지원은 2011년이 되어서나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sup>50)</sup> 또한 KK의 약탈 문화재 출처 조사와 반환에 관한 연구를 위한 예산이 모든 16개 주의 참여 아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확정되었다.<sup>51)</sup>

## V. 오늘날 약탈도서 반환에 관한 독일사서들의 인식

2003년 1월 16일 발행된 유대인신문에 슈미트(Schmidt)가 “문제시되는 출처: 독일도서관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약탈한 도서가 얼마나 존재할까?”라는 제목의 사실을 게재했다.<sup>52)</sup> 이 사실에서 슈미트는 약탈된 예술작품의 반환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 도서관에도 들이닥쳤다는 다소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 이 명제의 시발점은 2002년 11월 14일 개최된 하노버 심포지엄이었다. 회의 보고장에서 드레브스(Drews)는 이 심포지엄의 개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국가사회주의의 도서의 약탈, 그리고 그 도서들을 상속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주제가 드디어 도서관과 도서관 관련 모든 기관과 단체, 그리고 일반 대중의 적절한 주목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sup>53)</sup>

하지만 슈미트는 약탈도서의 출처 연구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도서관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약탈도서의 출처 연구에 필요한 재정 확보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재원 문제는 2017년까지 확보되었으므로 약탈 도서의 출처연구와 반환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독일도서관에서 나치가 행한 불의를 청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하노버 심포지엄을 계기로 2000년 초에 시작되었다. 1988년 투싼트(Toussaint)는 독일 통일 직전 “국가사회주의 시기의 도서관”이라는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렸다. 그는 이 설문지에서 도서의 구입 방식에 대해 물었다. “국가사회주의적 저술들이 의식적으로 선호되어 수집되었습니까?” 혹은 “압류된 유대인 사설도서관의 책들이 구입되었습니까?”였다. 투싼트에 의하면 그 당시 설문조사의 반응은 매우 미온적이었다.<sup>54)</sup> 2004년에 다시 비슷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설문 조사는 약탈도서

50) Lost Art Internet Database Home page, <<http://www.lostart.de>> [cited 2010. 4. 8].

51) Lost Art Internet Database Home page, <<http://www.lostart.de>> [cited 2010. 4. 15].

52) U. Schmidt, “Problematische Provenienzen : wie geraubte juedische Buecher stehen in deutschen bibliotheken?” *Juedische Allgemeine*(Jan. 2003), p.6.

53) J. Drews, “Tagungsbericht vom Symposium Juedischer Buchbesitz als Beutegut”(Nov. 2002). Hannover, <<http://hsozkult.geschichte.hu-berlin.de/tagungsberichte>>.

54) I. Toussaint, “Zweielei Fragebogen: Untersuchungsraster fuer Quellenstuduen ueber wissenschaftliche Bibliotheken im Dritten Reich,” *Bibliotheken waerehend des Nazionalszialismus*, hrsg. von P. Vosodek u.

의 반환에 관해 독일 도서관인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모두 593개의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에 설문지가 전달되었다. 하지만 단 68개의 도서관들만이 답변을 보냈고, 그 중 43개가 학술도서관이었다. 그 중 28개의 도서관은 그들의 약탈도서를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12개의 도서관이 약탈 도서 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up>55)</sup> 물론 두 번째 설문조사의 결과는 첫 번째 보다는 약탈도서 반환에 관한 독일 도서관인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약탈 문화재를 소유한 나라들은 문화재 반환이라는 주제가 이슈화 되면 항상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고수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와 정책을 개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결과도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아직 시작 단계이므로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장에서 언급되었듯이 몇몇 도서관들은 확인된 약탈도서를 반환하고 있고 또 Lost Art DB에는 거의 매일 약탈 도서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고 있다. 오늘날 약탈 도서를 찾아서 반환하는 작업은 도서관 종사자들의 양심과 도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약탈도서의 반환은 이제 더 이상 역사에 대한 의식 있는 사서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독일 도서관인들의 과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VI. 결론 및 우리나라 도서 환수를 위한 제언

나치시대에 조직적으로 약탈된 많은 양의 유대인 장서를 아직도 독일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20세기의 불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21세기로 진입할 수 없다는 워싱턴회의의 암묵적 지시를 시작으로 공동선언문, 하노버추구서의 채택은 독일도서관들이 나치시대의 만행에 대한 반성을 그 어느 때 보다는 어떠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였다. 약탈도서를 소장하고 있었던 도서관들도 전쟁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로 도서관 재건에만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은 전쟁 후 60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약탈도서를 반환하기 위한 첫 단계는 약탈도서를 찾아내는 것이다. 약탈도서를 도서관의 소장도서에서 찾아내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특히 약탈도서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도서관 장서로 안착했을 경우 그 과정을 추적하는 업무는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워싱턴선언과 이 선언문의 실현을 위한 가이드북과 지침서들은 독일도서관들이 약탈도서를 찾아내는데 필요한 다양하고 세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부 실용서이다. 마그테부르크 KK는 독일도서관이 그들 장서에서 찾아낸 약탈도서를 반환하기 위해, 또 그들이 반환받아야 할 도서 전반에

M. Komoroski(Wiesbaden : Harrassowitz, 1989), Teil.1, pp.297-302.

55) V. U. Albrink, B. Reifenberg, "Eine Umfrage unter deutschen Bibliotheken zum Theme NS-Raubgut," Juedischer Buchbesitz als Raubgut, Hrsg. von Regine Dehnel, Ff. a.Main, Klostermann, 2006, p.268.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다. 독일도서관은 약탈도서의 출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문서화하고 또 이 정보를 KK의 Lost Art Internet Database에 연결하여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독일도서관이 이 실용 정보를 근거로 약탈도서를 발견한 결과에 대해 도서관 관련 교육기관에 알리고 또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도서관 역사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도서관들의 활동은 그들이 과거사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독일이 그들의 과거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들 도서관장서에서 약탈도서를 파악하려는 노력, 더 나아가서는 찾아낸 도서를 반환하려는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도 많은 도서관들이 소극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의 도서관들은 약탈도서의 반환을 위해 그들의 소장목록을 조사하고, 또 확인된 약탈도서를 반환하고 있다. 아직까지 독일도서관들의 과거사 극복을 위한 활동, 즉 약탈도서의 반환을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하는 사업은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국보급의 도서들이 아직까지 불란서국립도서관과 일본 국내청에 있다. 1995년 TGV 사업과 연계하여 불란서국립도서관에 있는 우리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에 관한 협상이 있었다. 양국의 대통령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한 보기 드문 사례였지만 결국 우리 측의 준비 소홀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불란서는 의궤를 반환하는 대신 동등한 가치의 문화재를 제시하라는 ‘등가 원칙’을 주장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후 양국은 현실적인 접근에 합의하였다. 즉 의궤의 디지털화와 한국학자들의 의궤 열람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것이었다. 현재 의궤의 반환 협상의 타결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 작업은 진행되었다.

현재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 업무는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에서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과는 세계유산 등재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있을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 협상의 성과를 위해서 문화재청에 해외문화재 환수전담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sup>56)</sup>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문화재가 이슈화 되면서 정부 차원의 테스트포스(TF)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어떠한 형태의 조직이 신설되든 앞으로 전개될 해외문화재 반환의 협상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문화재의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불란서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의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 협상이 실패 끝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 팀이 의궤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sup>57)</sup> 일본 국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9년 11월 까지 조사해 발표한 76종 154책보다 5종 13책이 추가되었다.<sup>58)</sup>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56) “해외문화재 환수전담課 만든다,” 매일경제 2010년 3월 29일자 기사.

57) 김경임, 전계서, p.352.

58) “日 국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 5종 더 있어,” 조선일보 2010년 4월 14일자 기사.

